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시대에 역행하는 한반도의 신냉전구도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냉전구도는 이념에 토대한 대립구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다. 남한은 미국 진영이고 북한은 소련 진영이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나의 손실이 적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국제 질서이다.

80년대 말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와 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냉전구도는 종말을 고했다. 한반도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한중·한러 수교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됐다. 미북 간에는 북핵 동결·경제 지원·관계 정상화 논의 등을 담은 제네바합의가 채택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했다.

신냉전구도는 안보에 토대한 대립구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호국가 간의 대립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론과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논리적 토대이다. 북한의 핵무장론과 남한의 동맹강화론이 대립구도의 전면에 서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중외교를 강화했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와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중국의 신형대국 전략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대북 압박공조인 한미일중러 대 북한의 구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잠시 지연시켰다. 박근혜정부는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대북 압박공조는 와해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심화되는 느낌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결정적 요인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의 방어적인 제거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한다. 한중 간의 입장 차이는 간단하다. 사드 배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한국은 사드가 대북용이고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의한 대중용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의심하는 모습이다. 의심의 핵심적 근거는 사드 운영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중국의 의심 해소는 우리가 직접 사드를 구매해서 운영하든지 일본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전작권도 미국에 내준 상황에서 미사일방어체계의 편입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반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배치 결정 재고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환구시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강조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신형대국론을 강조한다.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전략이다. G2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보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소리 없는 보복도 있다.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대북 압박공조가 와해되고 있다. 한류 확산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 관광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반도가 불안정하다고 언급하면 관광객은 언제든지 급감될 수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 시절 소리 없는 고문을 많이 경험했다. 정신적 신체적 아픔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정국에 북한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아시아지역 안보포럼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이수용 외무상과의 밀애 관계가 이를 말해준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진전되는 모습이다. 양국 간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국장급 논의가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언론 규탄 성명에 한미연합훈련 규탄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규탄 성명은 무산되었다. 9월초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의 고위급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대립각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뉴욕 채널도 단절됐다. 일본과의 비선 접촉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향후 북한은 강온 병행 전략이 예상된다. 8·15를 맞아 민족공동행사 겸 고위급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하순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된다. 남북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노동미사일이나 수중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중강도 무력시위가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임을 주장한다.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심화될 듯하다. 국가안보는 예방 안보가 중요하고 국가 이익은 균형 외교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종교칼럼

‘종 노릇’하며 삽시다

양 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자유(自由·Liberty)와 해방(解放·Liberation)은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자유로운 주인’되기를 원하면서도 ‘섬기는 종’됨을 스스로 인정한다.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에서 성서의 확인을 선언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유로운 주인이며 동시에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된다”라고 했다. 이 확신은 자유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헌신한 삶에서 얻어진 것이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된 백성들은 제 각기 자유하는 주인이 되었다.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나 자유는 탈선을 하고 범람하는 홍수가 되어 사회질서를 파괴했다. 자유자는 범죄자가 되고 자유는 스스로 구속을 자처했다. ‘신음하는 자유’는 다시 자유의 자유를 울부짖게 됐다. 자유하는 주인의 불행은 섬기는 종의 윤리적인 차원을 갖지 못한 데서 생긴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사람은 자유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한다. 자유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 요청이 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고, 생물이 공기 없이는 못 살 듯이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못산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이 희구하는 최고의 가치임에 틀림없다.

자유는 인간이 생존하고 전 영역에서 요청되는 자각적 생명의 자연, 필연의 발로이다. 인류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 그리고 신앙과 사상, 언론과 집회의 자유, 생존의 자유를 추구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 본연의 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도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희랍인들은 진·선·미를 추구하고 조화된 인격을 완성하므로 개성의 개발이나 욕망의 충족으로 인간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자유의 근본인 신을 떠나서는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물줄기처럼 참 자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승리했다. 자유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4·19 때에도, 빛고을 광주에서는 5·18 봄에도 이미 체득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비극을 맞았다.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 자제를 못했던 까닭이라고 하면 빗나간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인이 명령하고 주관하며 종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법과 정치의 질서였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는 정치질서다.

신앙과 사상,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대헌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즉 국가가 독립하고 민주정치가 창달되면 자연히 국민은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빈곤을 몰아내고 부국이 되어도, 무력을 갖추어 외침에 대비할 만전이 보장되어도, 권세를 잡고 천하를 활보해도 언론, 집회, 신앙,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도,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 그것이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다. 인간성 문제, 죄악의 문제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같이 얽매이는 문제, 때로는 부자가 되면 더욱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다.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다 같이 얽매이는 문제, 때로는 권력을 쥐면 더욱 부패하며 욕망이 커지고 권력이 우상이 된다. 억압을 받는 자나 억누르는 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로는 강자가 되고 자유롭게 되면 더욱 폭군이 되고 방종하는 인간이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성이 해방을 위한 항거의 투쟁을 한 것이 문예부흥이나 근세사라고 하겠다.

‘섬기는 종’이 같은 윤리적 차원은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 종은 참으며 섬긴다. 그리고 복종한다. 이것은 자유를 누리는 주인의 아름다운 측면이다. 권력자도 참으로 자유로운 권력자가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정권도 집권하는 자유를 누리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백성도 자유로운 주인이 되기 원하면 섬기는 종이 될 줄도 알아야 한다.

요즘 같이 나라 안의 민주화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때도 없다.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 이제는 지키며 기다려 주었으면…. 대권을 잡으려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때를 욕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는 본을 보여 세상에서 자유로운 주인이 되기를.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도마뱀의 뇌와 사용후핵연료

이 경 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동전 던지기 게임을 생각해 보자. 어느 한쪽이 나올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 당신이 지면 500원을 내야 한다면, 이기면 얼마를 받고 싶은가? 600원 정도라고 답한 당신이라면, 너무 양심적인가?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2.5배는 되어야 수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간이 생각만큼 이득과 손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인간의 이런 경향을 ‘도마뱀의 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생존본능에 충실한 원시적 두뇌를 의미하는 비유로, 전문용어로는 편도체다. 인간은 편도체 작용 때문에 일상에서도 여러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성만 키우면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없다. 좌뇌와 우뇌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킬 수도 없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잘못을 유발하는 환경을 바꾸는 거다.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지만, 결정적 딜레마는 어딜 가더라도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도마뱀의 뇌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선택의 부담이나 갈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고 문제에 접근하는 경로를 달리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문제도 그렇다.

사용후핵연료는 말 그대로 쓰고 난 핵연료이다.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원자력발전에 사용되었던 다 쓴 우라늄 다발이 사용후핵연료다. 연탄을 태우고 나면 연탄재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연탄재야 쉽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당량의 열과 높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준위방폐물(High Level Radioactive Waste)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처리 방법이 단순치 않다. 지구촌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엄격한 규제기준과 특별한 관리절차를 국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이유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은 상당 부분 검증되어 운용 중이다.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수조에서 5년가량 보관하고 나면 열과 방사능이 상당 부분 저감된다. 이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영구처분 전까지 보관한다. 지난 1992년부터 우리나라 월성원전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원전에서 안전하게 관리 중인 시설이다. 정부가 지난 7월25일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확정하면서 우리 지역의 한빛원전에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힌 시설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2035년부터 고준위방폐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한빛원전에 새로 짓는 건식저장시설은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차제에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도 빼 가라는 주장이다.

30년 동안 원전지역 주민으로서 가진 부담감이야 충분히 공감한다. 그동안 손해봤다는 인식, 더 이상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도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연구결과에서 보듯 손해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심정적 저항에서 한 발 물러나 차분하게 지역의 위험과 이득을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가 계획을 마련하고 절차법을 만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고준위폐기물을 빼주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도 40년이 다 되어 간다.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로 60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도, 관리법도 없었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어제 관리 절차법을 입법 예고했다. 많이 늦은 만큼 조속한 입법체계 마련으로 구체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낸 세월만큼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한다. 한빛원전에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7월25일 확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제시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경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3차례 싣는다.

社 說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입법을 촉구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일까.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운 핵심 콘텐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는 해제하기 어려운 규제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으로 해제함으로써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특별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이후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5월 말 여야 의원 125명의 공동 발의로 현재 국회 기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들은 엊그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광주·전남 지역의 전략산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 신산업 및 드론 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신속한 입법과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될 경우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앞날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학생들 폭염 속 등교 방학기간 탄력적 조정을

폭염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예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등교한 학생들이 더위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입추(7일)가 지난 후에도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로 학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67개 고교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28개교가 방학을 마쳤다.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4일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했고 나머지는 16일께 등교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겨울방학을 늘리도록 한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교가 전체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여름방학을 기존의 4주에서 1주 줄인 탓에 빚어진 현상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하루하루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업 중에는 에어컨을 종일 가동함으로써 냉방병 걱정도 따른다. 학교는 학교대로 전기료 폭탄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응당 모든 학교에서 야외 체육수업은 취소됐다. 일부는 50분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고 오후 3~4시쯤 하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땡볕에 땀투성이가 될 학생들의 귀갓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개학이 너무 이르다’는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갈수록 무더위가 심해지고 겨울이 따뜻해지는 기후 패턴을 고려해 오히려 여름방학을 늘렸어야 했는데 거꾸로 가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현장은 돌아보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서 생각하는 탁상 행정 탓에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올 무더위는 예년보다 길어져서 이달 중순이 지나야 점차 물러날 것이라는 예보다. 따라서 조기 개학 학교들은 학생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상황에 따라 방학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천라지망

노자 도덕경에는 ‘천망’(天網)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을 뜻하는 천라지망(天羅地網)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나 물고기가 끝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듯,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빗댈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도덕경의 원문은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다. 하늘의 그물은 코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알아서 승리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응답하고,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문장에 뒤이어 나온다.

옛 문체여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표현도 추상적이어서 수많은 해설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것은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 “일단 천라지망이 펼쳐지면 ‘거짓과 불의’는 그물코를 빠져나가지 못하며, 결국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노자를 비롯한 옛 중국의 경세가들은 이른바 지식인이나 권력자들과 주로 교유했을 것이니 결국 ‘천라지망’ 운운은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또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다름이 아닐 터다. 물론 과거의 세계관, 정치 철학이 오늘날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자의 도덕경이 지금도 서점에서 인기 서적으로 꼽히는 것은 구절마다 인류 보편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갈퀴눈으로 째려볼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의 천라지망과는 달리 한반도 하늘에 펼쳐진 천라지망은 그물코가 너무도 성글다”는 자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법을 농락하는 것을 보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가 아직도 유효한 것 아닌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근두운(筋斗雲)을 탄 손오공이 아무리 빨리 그리고 멀리 달아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부처님 손바닥’ 같은 법망(法網)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